

중국의 7대 난제

2012. 4

해외마케팅지원본부
북경지부

< 목 차 >

I. 개 요

II. 중국의 7대 난제

1. 빈부격차
2. 불균형 성장
3. 부정부패
4. 주택가격 버블
5. 취업난
6. 의료난
7. 교육 불평등

I. 개 요

1. 중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

□ 개혁개방 30 여 년간 중국은 연평균 10%대의 초고속 성장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경제성장은 이미 중국식 사회주의 모토이자 중국내 문제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됨

1) 경제력과 국력이 크게 증강

— 2011년 중국의 GDP는 74,262억 달러로 1978년에 비해 300배 이상 성장, 연평균 증가율도 10% 수준에 도달

— 2011년 기준 GDP(국내총생산액)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G2)이며, 2020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G1이 된다는 전망도 있음. 대외무역도 세계 2위에 올랐고 수출은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음.

○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1978년 1.8% → '11년 9.2%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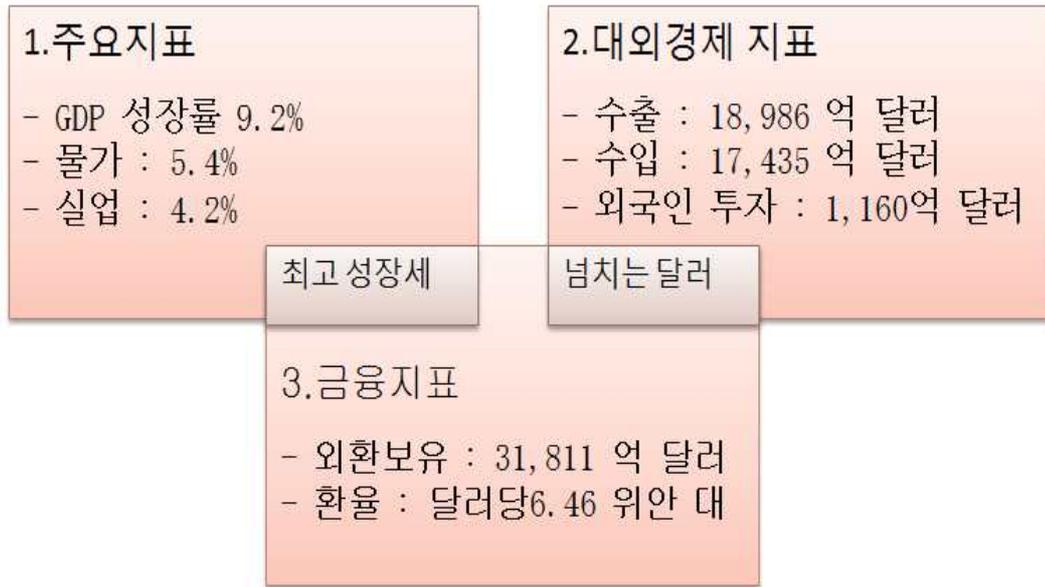
2)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

— 1978년 중국 도시주민의 연간 평균수입은 55달러(343.4위안)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5,449달러로 약 100배 확대

<중국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

연도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GDP 성장률 (%)	8.3	9.1	10.0	10.1	11.3	12.7	14.2	9.6	9.2	10.4	9.2

<그림> 2011년 중국경제 지표



자료 : 북경지부 종합

연도	GDP	GDP 순위	무역규모	외환보유고	대미무역액	
					수출액	수입액
1978년	2.16	-	206.4	1.67	97.5	108.9
2002년	12,371	6위	6,208(5위)	2,864	700(1위)	272(4위)
2011년	74,262	2위	36,421(2위)	31,811	3,245(1위)	1,222(4위)

< 연도별 중국의 경제지표 비교 >

(단위 : 억 달러)

(자료원 : 중국통계국, 중국해관)

2. 성장 그늘 속 문제점 노출

□ 2012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7.5%. 이는 2004년(7.5%)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7%대로 하향 조정함

— 중국은 지난해에도 9.2%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는 등 최근 10년 연속 초고속 성장을 기록함.

□ 이러한 중국의 고속 성장 그늘 속에 내부적으로는 불균형 성장, 빈부격차 등 다양한 모순들이 내재해 있음

— 이와 관련 중국정부가 선정한 중국의 7대 당면 난제는 빈부격차, 불균형성장, 부정부패, 주택가격 버블, 취업난, 의료난, 교육불공평 등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음

1) 빈부격차

— 2011년 말 기준 중국 가구당 1일 소득이 1달러 미만인 빈곤층 인구는 무려 1.28억 명에 달함. 한편 중국 1%의 부자가 전체 개인 자산의 44%를 보유(세계 평균치 34.6%를 크게 초과)

— 중국의 지니계수도 0.47(세계은행 수치)에 달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수준(지니계수 0.4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함.

2) 불균형 성장

—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동부 연안 지역과 도시를 위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지역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경제수준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2011년 중국 도시주민의 소득이 농촌의 3배를 넘어 세계 최대의 도·농 소득차를 기록한 가운데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 소득

차가 4대 1로 나타났음

* 도농간 주민 소득: 1983년 1.82:1 → 2011년 3.23:1로 확대

o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도·농 소득차가 1.6배 이하이며 서방 선진국들은 1.5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3) 부정부패

— 2011년 중국의 각종 직무 범죄 건수가 32,567건에 달한 가운데 연루된 공무원 범죄수는 44,506명임. 이 중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건수가 반 이상을 차지한 18,464건으로 여기에는 처장급 이상 2,524명, 차관급 198명, 장관급 7명이 포함됨

4) 주택가격 버블

— 2011년 북경의 신규주택 평균 분양가격은 3,780달러/m²
o 고급아파트의 경우 8,700달러/m²로 뉴욕 맨허튼의 9,200달러/m² 수준
o 북경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741달러, 뉴욕은 4,200달러로 1/5 수준

— 판매/임대 가격 비율도 위험수위인 300:1를 훨씬 넘는 500:1

5) 취업난

— 중국의 총 취업 인구수로 보면 여전히 노동력의 공급과잉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매년 취업을 희망하는 도시 노동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할 것이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조건하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리는 매년 1,200만개에 불과
o 2011년 인력시장에 진입한 신규 노동력은 1,500만 명이고, 그 중 고교 졸업생이 630만 명으로 상회

- 중국의 농촌에는 아직도 1억 여명의 잉여 노동력이 있으며, 2억 여명의 농민공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
- 한편 2011년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0%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 중국의 고용시장은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

6) 의료난

- 중국의 인구수는 세계의 20%에 이르지만 의료비 투입은 6,367억 위안으로 세계 총액의 3%에 불과함. 2009년 중국의 총 의료비 예산가운데 정부측 투입이 24.7%로 선진국의 수준(75%)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의 수준(55%)에도 훨씬 못 미침
- 의료비 투입이 GDP의 1.35%를 차지하여 선진국의 6%~8%, 개도국의 2%~6%에 비해 많이 부족함

7) 교육 불평등

- 2011년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분야 투자 비중은 3.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선진국 (5.1%)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도국 (4.1%) 보다도 낮은 수준임.
- 상하이 중학생 평균 교육사업 예산은 1만 5,474위안
- 반면, 귀주성은 2,311위안(상해의 1/6 수준)에 불과함

II. 중국의 7대 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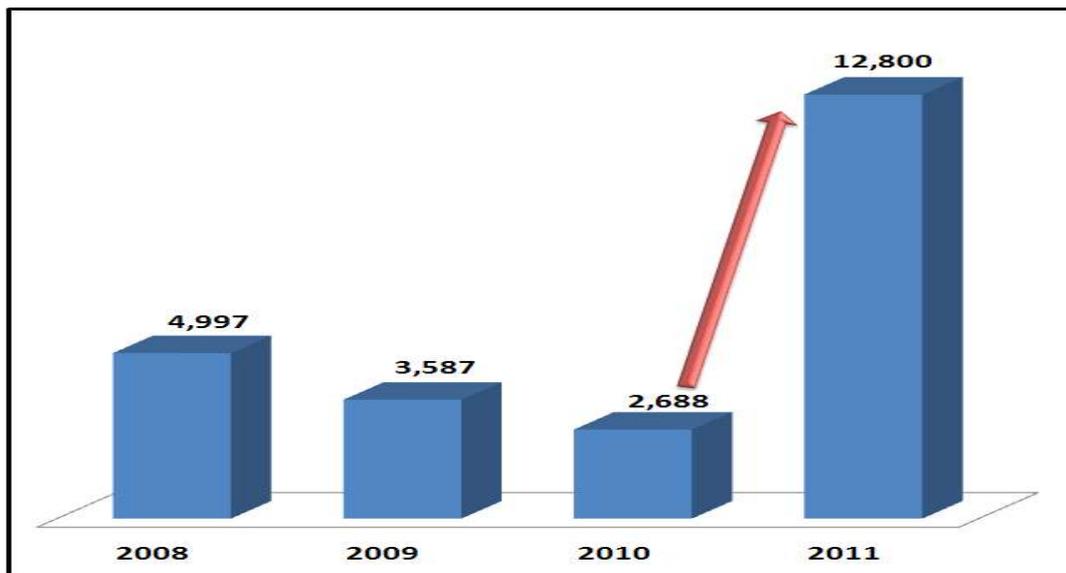
【난제1】 빈부격차

1. 분배 불평등 현황

□ 지난해 말 중국정부가 발표한 신규 빈곤층 기준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가구당 1일 소득이 1달러 미만인 빈곤층 인구는 무려 1.28억 명에 달함

— 지난해 말 중국정부는 빈곤인구 기준을 가구당 연간 소득 2,3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2009년도의 기준인 1,193위안보다 92%나 올랐음. 이에 따라 빈곤층 인구수가 2011년에는 무려 1.28억 명으로 늘어났음

< 중국 빈곤층 인구 현황 > (단위 : 만명)



(자료원 : 중국사회과학원)

— 아울러 세계은행 기준 1인 1달러 소득미만인 인구도 1.5억 명에 달함

— 또한 13억 인구 중 5억 명 이상이 1일 생활비가 2달러 미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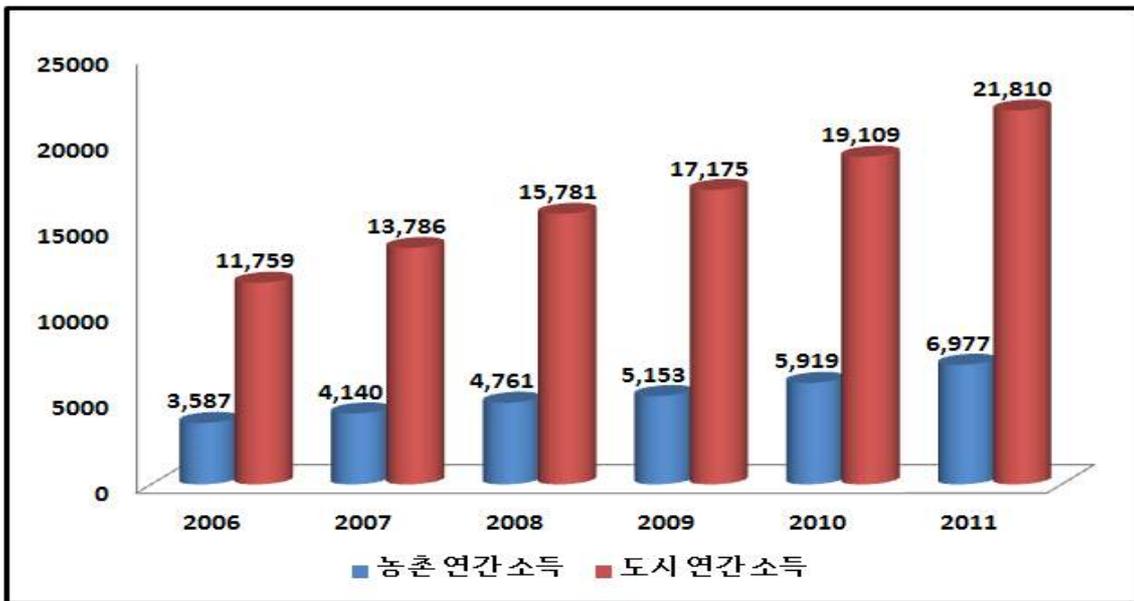
것으로 집계

□ 계층별 지역별 소득수준 격차는 이미 한계 상황을 넘어섰음

- 중국 1%의 부자가 전체 개인 자산의 44%를 보유(세계 평균치 34.6%를 크게 초과)
 - 2011년, 개인 자산 1억위안(약 1,6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7,500명에 달한 가운데 이중 600명이 무려 1억 달러 이상의 소유자인 것으로 집계됐음
 - 중국부동산의 72%를 부자가 점유
(부자기준 : 유동자금 169만 위안)
- 상해(上海)의 1인당 GDP가 12,911달러인 반면 귀주성은 2,495달러에 불과하여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도 0.47(세계은행 수치)에 달해 사회적 불안 야기하는 수준(지니계수 0.4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함.
- 최근 5년, 도농별 연간 소득을 비교해 보면 1인당 농촌의 소득은 도시의 1/3에 불과함

<1인당 농촌/도시별 연간 소득 추이>

(단위 : 위안)



□ 국민의 개인소득은 하락, 정부와 기업의 소득은 증가세

— 2007년 기준, 중국의 개인소득이 국민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5%로 1992년보다 10.8%p 하락

— 근로자의 보수가 GDP에서 점하는 비중도 1997년 53.4%에서 2007년 39.74%로 하락

□ 정부 독점업종들의 지나치게 높은 소득

— 석유, 전력 등 일부 업종들은 중국 정부가 부여한 독점권을 활용하여 쉽게 달성한 고액의 이윤을 대부분 직원들의 소득과 각종 복리혜택으로 활용

□ 통제 불가능 불법소득 산재

- 합법과 불법사이의 애매한 "회색수입"이나 "음성수입"들은 통제 자체가 매우 어렵고 소득 분배의 범위에서도 배제됨
- 2011년 "陰性소득"은 1조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0%가 高소득자에게 돌아갔음(자료원 :中国改革基金会国民經濟研究所副所長 王小魯)
- 자의적으로 요금징수, 벌금부과, 가격인상 강요
- 뇌물, 커미션, 출연료 수수 등 불법소득이 매우 다양함

2. 분배 불평등의 원인

가. 체제개혁의 미흡

-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체제 메커니즘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규칙들이 여전히 산재하고 있어 불공평 분배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현재 중국은 체제개혁과 사회 구조조정 과정 중에 처해 있음
- 지역별 및 산업분야별 개혁의 시점과 강도가 서로 달라 분배 기회나 자원의 점유에 있어 이익분배의 격차를 초래

나. 정책적 제약

- 도시 농민공들의 노동권리와 이익보장이 미흡하고 기본 사회복지보장제도가 미비
- 통계에 따르면 도시 취업자 가운데 養老 및 의료보험가입 비율은 60% 수준이며, 농민공은 20%에 불과

다. 정체된 분배제도 개혁

- 소득분배 비례와 관리감독 기능 등에 대한 개혁의 미흡으로 1차,

2차, 3차 분배과정에서 여전히 합리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국가, 기업, 개인 등 3자간 합리적 비례관계가 불명확하고, 정상적인 임금인상 메커니즘이 수립되지 않아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GDP 또는 기업 수익증가율에 미치지 못함
 - o 실제로 2011년 개인소득세액 6,054억위안 가운데 노무수당, 근로소득, 자영업소득에 의한 소득세 비중이 각각 28.0%, 23.6%, 13.1%를 차지

3. 시사점

- 중국은 현재 중국식 사회주의 달성 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13억 국민들이 골고루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
 -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분배 불공평문제점이 사회적인 핫이슈로 되고 있으며 분배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매우 높음. 따라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첫 번째 해결과제는 빈부차 해소임
- 현재 중국은 경제적 여유에 따른 분담능력이 강화되어 분배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소득분배는 사회발전의 주요 이슈로 국민의 실익과도 연관되고 나아가 개혁과 안정적인 사회건설과 경제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침

【난제2】 불균형 경제 성장

1. 불균형 성장 현황

- 중국은 개혁개방 30여 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동부 연안 지역과 도시를 위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지역별 불균형 성장에 따른 경제수준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가. 도농간 격차

- 2011년 중국 도시주민의 소득이 농촌의 3배를 넘어 세계 최대의 도·농 소득차를 기록함.
 - 도농간 주민 소득 : 1983년 1.82:1 → 2011년 3.23:1로 확대
 - 도농간 주민 소득차 : 1978년 209.8위안 → 2011년 16,998 위안
- 중국의 도·농 소득차가 커진 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진행돼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따라서 서부지역의 경우 도·농 소득차가 4대 1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도·농 소득차가 1.6배 이하이며 서방 선진국들은 1.5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 중국의 도·농 소득차는 3배를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큼.
- 문제는 중국의 도시 주민의 소득이 농촌 주민보다 훨씬 많아 농촌 주민의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더라도 도·농 소득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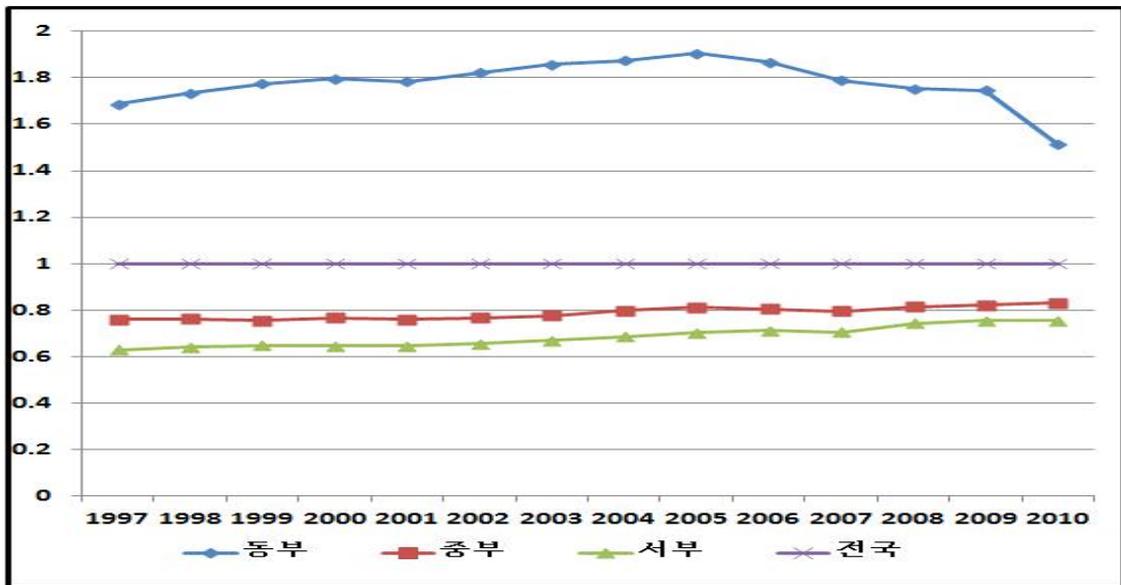
나. 도농 및 지역별 기초 공공서비스 수준 차이 노출

- 1인당 교육비 지출액 :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의 73.5%에 불과
- 병원시설 점유율 : 도시 70% : 농촌 30%
- 1인당 평균 의료비용 : 농촌이 도시주민의 1/4에 불과

다. 지역별 격차

- 전국 1억여 명 빈곤층 중 중서부지역의 비중이 94.1% 차지
- 1997~2010년 사이 동부의 1인당 GDP는 전국 1인당 GDP의 1.78배로 기록 된 가운데 2005년에는 1.91배로 최고치를 기록
 - o 2011년 省별 평균 수입 : 상해 12,911달러, 귀주성 2,495달러

< 동,중,서부지역과 전국 1인당 GDP 비율 >



(자료원 : 중국경제망)

- 2011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부동산 개발 투자
 - o 동부지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3.6억 위안으로 서부지역 (1.3억 위안)의 2.8배에 달했음

2. 불균형 성장 원인

가. 자연적 원인

- 중국은 국토가 광활하고 각 지역 간 자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 평원인 동부지역은 기후가 좋고, 토양이 비옥하며 교통이 편리하여 원천적으로 유리한 성장 조건을 보유
- 그러나, 서부 지역은 주로 산악, 자갈, 사막 등으로 구성되어 기후가 건조하고 생태환경이 나빠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

나. 역사적 원인

- 수천년 동안 국가의 경제중심이 끊임없이 이동해 오면서 중국의 각 지방은 계속해서 성장 격차가 존재해 왔음
- 중원지역은 오랫동안 경제발전의 중심이었으나 당나라 이후, 특히 북송이후 경제중심이 장강 중하류와 동남 연해지역으로 변화
 - 新중국 건립초기 전국 공업과 교통운송시설의 70% 이상이 전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동북 연해지역에 집중
-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3선 도시건설 계획을 통해 중서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강화되었지만, 불균형 문제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

다. 정책적 원인

- 중국의 불균형 성장은 특정기간에 실시된 정부정책과도 관련이 깊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非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동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성장 개방하는 전략을 시행
 - 투자, 세제, 금융방면에서 동부지역에 편중된 정책 추진

【난제3】 부정부패

1. 부정부패 현황

- 2011년 중국의 각종 직무 범죄 건수가 32,567건에 달한 가운데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 범죄수는 44,506명으로 전년대비 1% 증

가함.

— 이 가운데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건수가 반 이상을 차지한 18,464건으로 여기에는 처장급 이상 2,524명, 차관급 198명, 장관급 7명이 연루된 것으로 집계됨

1. 前 철도부 부장 劉志軍
2. 前 길림성 부성장 田学仁
3. 前 산둥성 부성장 黄胜
4. 前 강서성 政協 부주석 宋晨光
5. 前 절강성 人大常委 부주임 張家盟
6. 前 내몽고자치구 부주석 劉卓志
7. 前 国家食品監督管理局 부국장 張敬礼

— 2003~2010년 부정부패 단속성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51.9%~70.6%임

배금주의 사상이 싹트면서 중국공무원의 부정축재 액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 그동안 4천여 명의 관리들이 최소 50억 달러의 부정한 돈을 챙겨 해외로 도피

— 이밖에 전국에서 검거된 도박사범중 공무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2. 부정부패 원인

가. 이익유혹

— 사회전환과정에 규범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다원화적인 이익주체는 최대이익 추구를 위해 여러 수단으로 관원들을 부패화, 또한

사회와 기타 개인재산의 증가도 많은 영도자들에 대해 큰 유혹이 되어 이러한 관원들이 권리로 돈을 얻으려는 시도

나. 체제 허점

- 사회체제 대전환과정에서 낡은 체제는 이미 타파되고 새로운 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많은 허점이 있으며 이는 부패현상의 발생과 확장에 영향을 미침

다. 감독 소홀

- 대전환 중 낡은 권력 감독계약체제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새로운 감독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권력에 대한 감독 관리의 부족과 약화는 권리의 남용, 부패의 발생을 초래

【난제4】 주택가격 버블

1. 중국의 주택시장 발전과정

-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은 계속해서 주택 분배제도를 실행하다가 개혁개방 후인 1998년에 도시주택 개혁방법을 모색

— 1998년 도시주택 개혁제도를 추진

- 1998년~2011년 기간중, 신규 건설주택은 86.6억㎡
- 2010년 도시 1인당 평균소유면적은 31.6㎡로 1974년의 4.7배

2. 주택가격 버블현황

— 중국의 주택가격은 2006년부터 급상승세를 타면서 2007말에 절정에 이르렀음. 2008년에 들어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가격이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9년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전국 주택가격은 평균 25.1% 상승

- 2010년 1분기, 북경의 평균 주택가격은 21,88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8.4% 인상
- 최근 중국은행 설문조사 결과, 지나친 가격인상으로 주택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고 하는 국민이 무려 70%에 달함

— 주택가격과 소득의 비율은 가구당 주택에 대한 지불능력과 경제 부담 능력을 반영

- 합리적인 수준은 3:1 ~ 6:1 사이지만 2011년 북경, 상해, 심천 등 大도시의 비율은 이미 10:1를 상회

연도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 교(%)	6.12	6.19	6.18	6.92	7.31	7.19	7.44	6.78	8.03	7.76	7.5

<중국의 연도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교 추이> (단위 : %)

(자료원 : 국가 통계국)

도시별	심천	항주	북경	하문	상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교(%)	15.6	14.1	12.9	12.5	12.4

<2011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위 5대 도시>(단위 : %)

(자료원 : 국가 통계국)

- 2011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살펴보면 북경, 상해 등 1선 도시와 2선 도시 사이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천진, 무한, 중경, 요녕 등 도시는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밖에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비율은 평당 월간 임대료 가격과 평당 주택가격의 비례로 보통 그 비례가 300:1인 경우 버블로 판단되는데, 현재 중국의 북경, 상해, 등 주요 도시의 비례는 500:1 내외에 달함

— 2011년 북경의 신규주택 평균 분양가격은 3,780달러/m²

- 고급아파트의 경우 8,700달러/m²로 뉴욕 맨허튼의 9,200달러/m² 수준

3. 주택가격 버블의 주요 원인

가. 양적 화폐 정책

— 화폐정책의 양적완화로 늘어난 화폐유통량이 투자를 자극

- 2009년 신규대출은 10억 위안으로 지난 3~4년간 총 신규대출액 수준

■ 통화량(억위안): 15,689('01)→24,032('05)→50,7488('11)

- 일부 실물경제가 금융위기의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량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원인으로 작용

나. 토지재정 문제

- 현재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토지사용권 판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전국 토지재정 수입

('08)1.04조 위안 → ('09)1.42조 위안 → ('10)2.9조 위안 → ('11)3.3조 위안

- 토지재정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은 다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

다. 법규, 제도 불완비

- 중국의 주택시장은 불과 10여 년의 발전과정을 경과하면서 아직은 법률 및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일천함

-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부동산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나라로 주택 보유비용이 매우 낮은 편임

라. 수요량 불균형

- 급속한 도시화로 대량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전한 결과 신규 주택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 초래

- 1998~2008년 기간 도시화 발전 속도에 따라 추산하면

- 2015년 중국 도시인구 비중은 52%

- 매년 신규 증가한 가구는 500만호

■ 그 중 대도시의 인구밀집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임

4. 시사점

-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일련의 부양정책 실행
 -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유발해 결국 소비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함
 - 동시에 주택가격 상승은 기존의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불안한 사회 및 사회적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부상

【난제5】 취업난

1. 최근 중국의 고용시장 현황

□ 중국의 총 취업 인구수로 보면 여전히 노동력의 공급초과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인구 구조로 예측해 보면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매년 취업을 희

망하는 도시 노동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할 것이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조건하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리는 매년 1,200만개에 불과

o 2011년 인력시장에 진입한 신규 노동력은 1,500만 명이고, 그 중 고교 졸업생이 630만 명으로 상회

— 중국의 농촌에는 아직도 1억 여명의 잉여 노동력이 있으며 2억 여명의 농민공들 중 상당수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

□ 2010년 2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0%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

— 광둥성에서만 90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하다고 발표

o 조사대상 기업들의 대부분이 국제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주문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실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

□ 중국의 고용시장은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모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

2. 중국 고용시장의 문제점

□ 중국의 거시경제 운용 과정에서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순과 갈등들이 취업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발전방식의 변화와 경제구조 조정이라는 힘든 과정에 직면해 있음

- 장기적인 청년 취업, 농촌 잉여 노동력의 취업, 실업자들의 재취업 등 3가지 취업 문제가 서로 경쟁적으로 얽혀있음
- 중국 노동력의 자질이 비교적 낮아 청년 농민공을 포함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단순 노동력 제공 업무에 종사
 - 기술공 특히 기사 및 고급기사는 오히려 부족하여 경제발전의 변화와 구조 조정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최근 취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성장 유지와 동시에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2008년 말부터 취업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2009년 전국 도시취업 인구가 신규로 1,102만명(목표대비 122% 달성)으로 확대
 - 도시 실업률도 4.3%를 유지하여 연간 예측목표치 4.6%를 하회

3. 구인난의 발생원인

가. 고향 근처에서 취업 및 창업하는 농민공들이 증가

- 최근 몇년 동안 중국 정부는 중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민들의 수입제고를 골자로 하는 농민 우대정책을 계속 발표
 - 중서부 지역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취업의 기회도 증가
 -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를 고려한다면, 실제 수입에서 연해지역에서의 노동 수입과 차이가 별로 크지 않게 됨

- 그 결과 국제금융위기 시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후 고향 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창업을 선호

나. 기업들의 낮은 임금수준으로 농민공들이 자발적으로 이탈

- 동남부 연해지역 기업들의 임금수준이 수십년 동안 상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농민공들의 스스로 동 지역을 벗어남
 - o 또한 농민공들은 의료, 양로, 주택, 자녀교육 등의 부문에서 현지 주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음
- 특히 농민공의 주체인 10~20대의 신세대 농민공들은 취업환경, 임금, 복리, 자기발전 등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권익을 점점 중요시하고 있어 근무 조건이 낮은 기업에 대해 취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

다. 농민공의 업무 수준이 기업의 요구수준에 미달

- 장강 삼각주지역과 주장 삼각주지역의 기업들은 대규모의 숙련공들과 기술공들이 필요
 - o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공들은 그에 상응하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인난과 취업난이 동시에 발생

【난제6】 의료난

1. 중국의 의료난 현황

- "2011년 CCTV 경제생활조사"¹⁾에 따르면, 2008~2011년 사이 연속 4년 동안, 의료난이 중국의 3대(소득, 의료, 부동산) 민생

1) "2011年中國CCTV經濟生活大調查" : 2008년부터 중국 중앙TV인 CCTV에서 개최하며, 각 계층의 10만여명의 국민들에게 국민생활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프로
(*2011년에는 104개 도시, 10만 명에 대해 설문조사 진행)

문제로 부각됨

□ 현재 중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73세에 달해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명(63세)을 훨씬 상회하여 선진국의 평균수준인 75세를 육박하고 있음. 아울러 임산부 사망률, 영아 사망률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보건지표들도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위에 랭크됨

—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삶에 대한 질적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준도 한층 제고됨. 2008년 제4차 국가위생서비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41.2%의 주민들은 외래진료에 대해 불만족하고 44.2%는 입원 치료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많았음.

□ 의료난이란 바로 환자들이 진료과정 중에서 당면한 각종의 불만과 어려움을 요약한 용어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음

— 첫째, 큰 병원에 가서 진료 받기 어려움

— 둘째, 전문의 진찰이 하늘의 별 따기

— 셋째, 진료비용 부담이 큼

2009년 기준 외래진찰 평균 비용은 160위안이고 입원환자의 평균 비용은 5,952위안에 달했음. 병원의 입원치료비는 평균 1회당 도시 주민 연 평균 소득의 1/3, 농민의 연간 평균 소득의 1.12배에 달했음

※ 2008년 기준 외래진찰 및 입원치료의 비용은 각각 1991년도의 12.5배와 10.1배로 폭등하여 연 평균 치료비 상승률은 각각 16.0%, 14.5%에 달해 같은 기간 CPI 증가율(10%) 보다 훨씬 높았음

— 넷째, 농촌의 의료자원 부족에 따른 의료난

사회 각 계층에서 의료난을 가장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계층은 농민임

□ 상기 거론된 의료난 문제점들은 단순한 진료난에 불과

- 의료자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 의료난이란 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고신기술 약품, 희소한 약품, 그리고 첨단 의료기기 검사비가 높다는 것임

2. 의료난 발생 요인

가. 정부의 의료부문 투입 부족

- 중국의 인구는 세계의 20%에 이르지만 의료비 투입은 세계 총액의 3%에 불과함. 2009년 중국의 총 의료비 중에서 정부측 투입이 24.7%로 선진국의 수준(75%)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의 수준(55%)에도 훨씬 못 미침
- 2011년, 중국 의료비 투입은 6,36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2.5% 증가하여 총 GDP의 1.35% 차지하지만, 선진국의 6%~8%, 개도국의 2%~6%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

나. 의료자원 분포 불균형

- 피라미드 구조가 정상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인데, 중국은 이와 반대로 거꾸로 된 피라미드 구조임
 - 약 70%의 의료자원이 도시에 집중됐고, 고신 기술과 우수한 의료진들이 대거 대도시의 큰 병원에 몰려있는 반면 광대한 농촌 지역은 30%에 불과

다. 公立 병원들의 이익 추구

- 중국의 병원 가운데 71%가 공립 병원인데 이들 병원에서 80%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의 제왕 절개 비율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고 항생제

의 남용도 매우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런 의료 메커니즘에서 초래된 결과

라. 의료 보험 수준이 낮음

- 2011년 말까지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 도시 주민의 의료보험과 新농촌 합작 의료시스템 제도가 이미 13억 이상으로 보급됐으나 아직도 수천만 명은 기본 의료보험이 전혀 없는 실정임

마. 약품 가격이 턱없이 높음

- 중국에는 제약업체수는 많으나 업체규모가 작아서 ‘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복용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치열한 시장경쟁과 약품에 대한 감독관리가 미흡해 약품 및 의료장비의 생산·유통 질서가 혼란을 겪고 있음

— 병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제조원가, 출고가격, 도매가격, 입찰가격, 정부의 고시가격, 병원의 구매가격, 소매가격 등 7개 절차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 약품 가격은 원가의 10배에서 심지어 100배까지 상승함

- 예를 들어 마이신 주사액의 출고가격은 0.6위안 이지만, 최종 병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12.6위안으로 가격이 무려 21배로 인상됨

바.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약품 및 의료비용 급등

- 의료과학기술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신규 출시된 약품과 진료검사비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일부 환자들은 초보적인 보건의료 상식마저 없어 중병, 작은 병

불문하고 무조건 대형 병원을 찾음. 또한 일부 환자들은 무조건 비싼 비용을 치러가면서 전신 검사와 비싼 약품만 선호 함

- 게다가 고령화시대의 도래, 그리고 질병 패턴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의료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난제7】 교육 불평등

1. 중국의 교육 불평등 현황

□ 도시와 농촌의 무료 의무교육 전면 달성

— 고등 교육의 총 입학률: (1949년)1.5%→(2011년) 85%

— 대학 교육 규모가 세계 1위로 부상

○ 대학 총 입학률: 73.4%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대 포함)

—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현저하게 상승

○ 15세 이상의 1인당 교육 기간: (1949년)1.6년→(2011년)8.9년

□ 2009년 말 조사결과, 56.5%의 응답자가 교육 불평등문제를 지적

— 교육 평등문제 중 우수교육을 받을 기회, 교육 받는 정도와 질 등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

— 중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택이 보편화됨

○ 자녀들을 우수한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부모들은 상당히 많은 "학교 선택"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학교 선택"에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해 학생들은 각종 학원에 다니고 여러 자격증을 따야 되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초등학교화, 초등학교의 중학교화 현상이 날로 심각

2. 교육 불평등의 발생 원인

가. 경제성장 불균형

□ 도, 농 불균형

— 도시로 이주(移居)한 "신규 도시인"²⁾과 "農民工"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농촌 교육문제가 대두

○ 중국의 6~14세 학령인구는 2000년의 2.05억 명에서 2010년에는 1.58억명으로 감소

2) 농촌에서 도시로 진출하여 도시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인구

— 농촌학교의 시설이 낙후하고, 교육수준 저하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통근(通勤) 또는 기숙 등을 통해 도시 학교로 이동

○ 2001~2010년 사이, 농촌 소학교는 55만개에서 26개로, 농촌 중학교는 6.4만개에서 5.5만개로 감소

□ 지역 불균형

— 2008년 상하이 중학생 평균 교육사업 예산은 1만 5,473.62위안
— 반면, 귀주성은 2,310.83위안(상해의 1/6 수준)

나.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

—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용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

○ 2011년 이 비중은 3.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선진국 (5.1%) 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도국 (4.1%) 보다도 낮은 수준

다. 교육자원 분배의 불합리

— 1950년대부터 중국은 중점 학교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것이 학교간 자원분배의 불균형을 초래

라. 정책과 제도적 미비

— 9년 의무교육과 대학교 교육의 대중화가 기본적으로 보급된 이후 중국의 교육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교육 평등에 영향을 주는 도농차별화의 경제구조는 여전히 존재 <끝>